

# 해방직후 북한 국내 공산세력의 국가건설전략: 오기섭의 ‘인민전선’을 중심으로\*

안 문 석\*\*

- I. 머리말
- II.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 III. 인민전선 전략
- IV. 공산청년동맹 견지 전략
- V. 직업동맹 독립
- VI. 국내과 국가건설전략의 형성 원인
- VII. 맺는 말

## 국문요약

해방직후 북한지역에서 항일빨치산파와 경쟁하던 국내민족주의세력은 ‘인민전선’으로 대표되는 분명한 국가건설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노농소비에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인민전선은 민족 자본가와 지주, 나아가 소극적 친일 세력까지 국가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김일성 세력의 민족통일전선과 극명하게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인민전선과 노농소비에트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이들의 국가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노획문서와 미국 군정문서 등을 통해 국내 공산세력의 국가건설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낸다. 노농소비에트의 내용은 토지개혁과 공장의 국유화 등을 전제로 한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된 노농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루기 해서 오기섭과 국내 공산세력은 2단계 혁명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던 것으로 분석된다. 1단계는 당시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를 수 있는 부르주아 혁명과 같은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민자주적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과는 달리 이 단계에서도 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와 농민이어야 한다는 주장

이었다. 2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방점은 노농소비에트에 찍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단기간에 거치고 조속히 2단계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세력의 전략이었다. ‘노동자·농민 중심 속성 2단계 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공산세력은 인민전선 실현 차원에서 김일성의 민주청년동맹 재조직론에 맞서 공산청년동맹을 견지하려 했고, 직업동맹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당에 대해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파는 결국 김일성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정치노선도 빛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체제 형성 과정의 실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국내파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하겠고, ‘빈농위원회’의 내용이나 국내파 주역세력의 분열 과정 등이 우선 후속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국내 공산세력, 항일빨치산파, 인민전선, 민족통일전선, 오기섭, 김일성, 노농소비에트, 2단계 혁명론, 공산청년동맹, 직업동맹, 빈농위원회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2312).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I. 머리말

잘 알려진 것처럼 해방직후 북한지역에는 항일빨치산파, 소련파, 연안파, 국내 공산주의세력, 국내 민족주의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경쟁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계열 가운데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정통성을 가진 쪽은 국내 공산주의세력과 연안파였다. 이들 두 세력에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조선공산당 창건 또는 재건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항일빨치산파와 소련파는 한국공산주의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신진세력이었다. 국내에서 좌익운동을 하던 국내 공산주의세력은 세 갈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오기섭과 정달현, 리주하 등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세력, 두 번째는 김용범, 박정애, 장순명, 주녕하, 장시우 등 김일성 지지세력, 세 번째는 박금철, 리효순, 리송운 등 함경남도 갑산을 중심으로 김일성 세력과 공조해서 항일운동을 하던 갑산파이다. 갑산파는 일제 강점기 주요활동을 항일빨치산파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항일빨치산파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다. 국내 공산세력 가운데 김일성 지지세력과 갑산파는 해방 정국에서 김일성 지원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나름의 이념과 전략을 따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갑산파는 1967년 숙청을 당할 만큼 김일성과는 다른 노선을 제기하지만 적어도 해방정국에서는 아니었다. 따라서 해방 정국에서 나름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 하면서 항일빨치산파와 맞섰던 세력은 첫 번째 사회주의 노동운동세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력의 이념과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 글에서 국내 공산주의세력 또는 국내파라 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들을 가리킨다.

해방직후 세력 간 경쟁과 갈등은 주로 항일빨치산파와 국내파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들 두 세력 간의 경쟁은 권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이념과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이념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달랐다. 국내파는 주로 항일빨치산파와 대립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념과 전략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자본가와 민족주의적 지주도 제외하고 순수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민전선론, 직업동맹(노동조합)은 철저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남아야 한다는 직업동맹 독립론 등은 항일빨치산파의 주장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항일빨치산파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민족 자본가와 지주들도 국가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통일전선론, 직업동맹도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당 지도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파의 당시 정세를 보는 관점, 노동자에 대한 인식, 국유화에

대한 견해 등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결국은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달랐던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여러 세력 가운데 이후 북한 역사의 주역이 된 항일빨치산파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 밖의 세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국내파에 대한 심층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우선 오기섭을 위시한 국내 공산주의세력이 주장한 인민전선의 실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자체가 없다. 또 국내파 내부의 세밀한 노선 차이, 인민전선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세력이 김일성파와의 경쟁에서 조기에 패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파의 이념과 전략, 전략 실패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 북한사회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파 간 경쟁의 본질적인 부분을 밝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기에 보다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해방직후 김일성 세력이 추구했던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연구는 꽤 깊이 진행되어왔다.<sup>1</sup> 하지만 북한 국내 공산세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인 부침과 직업동맹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스칼라피노·이정식의 연구는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다양 정치세력의 부침과 김일성 세력의 민족주의 세력과 국내파에 대한 탄압, 그 속에서의 오기섭의 몰락 과정을 연구해 해방직후 북한정치 이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sup>2</sup> 김준엽·김창순의 연구도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설치를 둘러싼 국내 공산세력과 김일성 세력의 정치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주요 세력 간의 경쟁과 갈등, 권력장악과 숙청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일성 세력이 조선공산당의 하부기관으로서의 북부조선분국 설립에 동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분국

<sup>1</sup>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연구 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제11호 (2001); 이신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윤덕영, “해방직후 사회주의진영의 국가건설운동,” 『학림』 제14권 (1992); 서인석,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조민, “북한에서의 민주개혁과 통리전선,” 『연세』 제25권 (1987); 강인덕, 『공산주의와 통일전선』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북한공산화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72).

<sup>2</sup>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pp. 399~486 참조.

설립으로 북한지역의 각 도당조직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실상의 독립적 공산당 설립과 마찬가지로 계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3</sup> 서대숙의 연구는 북한 국내 공산세력이 김일성과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내파의 결속력 부족과 소련 공산당과의 유리, 지방세포조직 재건 실패 등에서 몰락의 원인을 찾고 있다.<sup>4</sup> 와다 하루키의 소련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연구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설립과정에서 있었던 소련군의 당중앙 창설 시도와 이에 대한 국내파의 반격,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 김일성의 민주기지론 등에 대한 주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5</sup>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기섭과 김일성의 정치노선에 주목한 것이 백학순의 논문인데, 김일성의 통일전선과 오기섭의 인민전선을 대비시키면서 경쟁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도 오기섭의 인민전선의 면밀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sup>6</sup> 김창순의 저서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주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오기섭의 논문이 발표된 시기, 그가 비판받은 회의의 이름과 개최 시기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고, 보다 정밀한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sup>7</sup>

직업동맹 논쟁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는데 서동만의 연구는 직업동맹의 자율성에 대한 오기섭의 주장과 이에 대한 김일성의 추궁, 그에 따른 오기섭의 패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서동만은 북한체제의 성립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북한 국내세력의 정치노선과 이의 부침, 그 원인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고 있다.<sup>8</sup> 김광운은 오기섭의 직맹 관련 주장에 주목하면서 오기섭이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계급노선에 대해 조직론상 좌편향으로 비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9</sup> 이주철의 연구는 김광운의 주장과는 달리 오기섭의 직업동맹관에 대한 논쟁은 권력투쟁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노동자의 물질적 이익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유지하려던 국내파 공산주의세력이 애국주의 사상으로 국가의 산업발전을 먼저 추진하려 했던 김

<sup>3</sup>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pp. 386~408.

<sup>4</sup>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서울: 이론과 실천, 1985), pp. 284~299.

<sup>5</sup> 와다 하루키, “소련의 대북한정책 1945~1946,”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pp. 234~308.

<sup>6</sup>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36~61.

<sup>7</sup> 김창순, 『북한50년사』 (서울: 지문각, 1961), pp. 106~111.

<sup>8</sup>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p. 280~285.

<sup>9</sup>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 2003), pp. 209~214.

일성 세력에 의해 세력기반이 약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10</sup> 예대열의 논문은 오기섭과 김일성의 직업동맹관을 당시의 경제적 조건과 연관지어 설명해 노동조합과 이를 둘러싼 논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조수룡은 직업동맹의 성격을 둘러싼 정파 간의 논쟁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의 노동조합들의 성격이 단체협약과 생산협의회, 증산운동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순응적인 직업동맹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고 탐구하고 있다.<sup>12</sup> 권오윤은 김일성 세력이 완전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국내세력의 기반이 되었던 노동조합의 성격을 스탈린의 논리를 이용해 변화시켜 나갔다고 분석한다. 즉, 정치권력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도 노동자들의 수중에 있게 된 것이며 노동조합은 투쟁이 아니라 증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스탈린의 논리를 활용해 직업동맹을 하나의 동원수단으로 개조했다는 것이다.<sup>13</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국내 공산세력에 대한 연구는 김일성과의 권력 투쟁, 그 속에서의 몰락 과정, 직업동맹에 대한 논쟁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그들의 정치노선의 세밀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노선투쟁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Ⅲ. 인민전선 전략

#### 1. 노농소비에트의 건설

오기섭 중심의 국내파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민전선 노선을 주장했다. 자본가와 지주는 중심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오기섭은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정권을 구성, 운영하는 ‘노농소비에트’를 구상하고, 실제로 ‘빈농위원회’를 조직해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려 했다.<sup>14</sup>

<sup>10</sup> 이주철, “북한의 국영기업 관리와 노동정책: 1946~1948년을 중심으로,” 『사총』 제46집 (1997).

<sup>11</sup>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 제70권 (2008), pp. 69~245.

<sup>12</sup> 조수룡, “북조선직업총동맹의 성립과 활동(1945~1950),” (경남대 북한대원 석사학위논문, 2005).

<sup>13</sup> 권오윤, “해방후 노동조합으로서 북한 직업동맹의 성격 변화(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sup>14</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3.2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 382.

‘노동정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파의 노동자 중심 국가건설 주장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에 가까운 것이었다.<sup>15</sup> 오기섭은 특히 친일세력이 국가건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sup>16</sup>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친일을 한 경우는 국가건설에서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기섭을 비롯한 국내파의 중심인물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적색노동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기섭과 정달현, 리주하 등이 주로 함경남도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지도했던 인물들이다. 일제통치하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이면서 자본가와 지주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일 수가 없고 모두 친일파라고 이들은 간주한 것이다.

1930년대 인민전선 노선을 내세운 세력은 이재유그룹, 원산그룹, 청진그룹, 삼천포그룹 등 여럿 있었다. 하지만 이념과 조직 면에서 어느 세력도 철저하지는 못했다.<sup>17</sup> 오기섭의 인민전선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험주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밑그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는 발견된다. 『해방일보』 1945년 8월 31일자는 함경남도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소련 정치위원회의 대표로 나온 쿠체로프(Kucherov)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싣고 있다. 함남집행위는 함남의 공산주의자협의회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함남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직이었다. 쿠체로프는 소련군정의 함남책임자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직후 오기섭이 북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함흥에 공산주의 조직을 꾸렸다는 것은 소련군의 문서로도 확인되는 만큼<sup>18</sup> 함남집행위에 오기섭의 세력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인터뷰 과정에서 쿠체로프가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전한다. 첫째, 일본인 소유 토지는 모두 몰수될 것이다. 둘째, 소련은 한국에 노동자-농민의 정권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연합국에 제안할 것이다. 셋째, 토지는 몰수되어 농민들에게 분배 될 것이다. 넷째, 공장도 국유화해 소련에서 처럼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sup>19</sup> 소련측이 이런 내용을 말했다

<sup>15</sup> Charles K.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New York: th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 59.

<sup>16</sup>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옳은 노선』 (도쿄: 민중신문사, 1946), p. 38.

<sup>17</sup> 강혜경, “1930년대 후반 ‘왜관그룹’의 인민전선술 수용,” 『역사연구』 제3호 (1994).

<sup>18</sup> 이를 확인해주는 소련군 문서는 <사포주니코프 (소련군정 정치사령부 제7호 정치국 부국장),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디미트로프 동지 앞』(1945.11.5),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고문서 보관소 (문서번호: 74915 29/86)>이다.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8), p. 109.

<sup>19</sup> “Establishment of the Workers’ and Peasants’ Regime……Japanese Land Should Be Confiscated,” *Hae Bang Ilbo*, 31 August 1945, Record Group 554,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는 것인데, 당시 함남지역 공산주의세력의 활력이 매우 강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함남집행위가 소련측을 만나 이런 요구를 하고 소련측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의 핵심은 노동정권의 창립이다. 일제의 잔재는 모두 청산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정권을 세워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공장도 국유화해 노동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기섭의 주요무대인 함남의 주요세력들의 의사 결집형태로 나온 것으로 미루어 오기섭이 제시한 인민전선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 주요 국내세력의 또 한 갈래는 현준혁 세력이었다. 현준혁도 초기에는 오기섭의 인민전선과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 주둔 소련군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15일 조선공산당 평남지구 확대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치노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서는 평남지구당부가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요해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정치노선상에 국부적 편향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의 각 당, 각 파, 각 단체, 각 계급층을 총망라한 단일한 민족적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며, 사유재산과 사유토지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남지역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현준혁이 협애한 시각으로 좌경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 것이다.<sup>20</sup> 이런 내용으로 보아 현준혁이 인민전선과 유사한 주장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 오기섭의 인민전선은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과는 그 성격상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통일전선은 국가건설에 민족주의적 자본가와 지주를 포함시키자는 대중노선이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벌써 이러한 노선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로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만 균중을 우리편에 쟁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것이다.<sup>21</sup>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도 친일 자본가와 지주는 국가건설 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일제에 대한 소극적 협력자는 포용하는 입장이었다. 생계를 위해 또는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일제에 복무한 사람, 소극적·피동적으로 일제에 복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65.

<sup>20</sup> 결정서 원문은 『해방일보』, 1945년 10월 30일; 『혁명신문』, 1945년 10월 16일에 게재되어 있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 410, 재인용.

<sup>21</sup> 김일성,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각 도당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1945.10.13),”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32.

무한 사람 등은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sup>22</sup>

이와 관련해 박헌영의 의식은 1945년 8월 20일 발표한 '8월테제'에 잘 나타나는데, 그는 여기서 과거 혁명운동의 파벌을 극복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에 의한 인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3</sup> 박헌영은 그러면서 '광범한 민주주의적 인민전선'의 형성을 주장했는데, '광범한 민주주의적 인민전선'은 노동자와 농민, 혁명적 인텔리겐차,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sup>24</sup>

물론 친일세력은 제외되는 것이다. 박헌영은 “금일에 있어서 두 가지 노선이 나서고 있다. 한 가지는 조선공산당에서 주장하는 노선인데 그것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 잔존세력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일소로서 완전독립을 달성하는 동시에 이상에서 규정한 의미에서만 진보적 민주주의 제 단체의 대표자의 집결으로서 전조선민족 통일전선이 결성될 것이요. 따라서 인민공화국은 건설된다”라며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세력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sup>25</sup> 결국 그의 노선은 민족통일전선과 유사한 것이었다.

## 2. 노동자·농민 중심 속성 2단계 혁명론

해방정국에서 주요 인물들의 이러한 노선 차이는 당시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규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다. 오기섭이 자본가와 지주를 국가건설세력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한반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적은 외세보다는 내부의 파쇼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주와 자본가를 파쇼세력의 중심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오기섭은 당시 해방직후 상황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1945년 10월 13일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한 오기섭의 당의 정치적 임무에 대한 보고에 나타난다.<sup>26</sup> “조선의 현 단계는 자본주의 계단이다. 이 계단에서 우리는 통일된 인민자주적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당의 좌경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한 가지

<sup>22</sup> 위의 책, p. 335.

<sup>23</sup>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편, 『남로당자료』 I (서울: 코리아콘텐츠랩, 2002), pp. 18~19.

<sup>24</sup>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p. 318~319.

<sup>25</sup>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주장 - 조선민족통일전선 결성에 대하여,”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옳은 노선』 (도쿄: 민중신문사, 1946), pp. 3~4.

<sup>26</sup> 위의 책, pp. 36, 38. 실제로 보고자는 ‘오○○동무’라고 되어 있는데, 오기섭이 이 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2인자인 제2비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요 보고를 한 오○○동무는 오기섭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하실운동에서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던 관계로 현 단계를 사회주의혁명 단계라고 보는 것이요, 둘째로는 세계혁명의 본령인 쏘연방의 국제정책과, 조선민족의 해방이 우리의 내재적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힘으로 되었다는 객관적 정세에 두어 범하는 오류이다. 셋째는 과거 전략했던 동무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허한 혁명적 언변을 쓰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혁명을 바로 추진할 수 없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노농소비에트’ 주장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결국 오기섭은 2단계혁명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단계에서 부르주아혁명과 같은 과정,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의 과정을 통해 ‘인민자주적 공화국’을 건설하고, 여기서 다시 노동자·농민이 주체가 되는 노농정권 단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농정권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인민자주적 공화국’은 되도록 짧게 거쳐야 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마르크스 전통적인 주장과 유사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사회주의 혁명의 2단계로 혁명이 추진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에 강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한 오기섭으로서는 어찌먼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마르크스 혁명론과는 달리 1단계부터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2단계 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오기섭의 국가건설전략은 ‘노동자·농민 중심 속성 2단계 혁명론’이 되는 것이다.

『해방일보』 1945년 8월 31일자에 실린 함경남도 집행위원회와 소련 정치위원회 대표 쿠체로프와의 인터뷰 내용도 2단계 혁명론으로 분석하면 그 틀이 좀 더 명확해진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세 번째의 토지개혁과 네 번째의 공장국유화 문제는 ‘인민자주적 공화국 단계’에서 해결하고,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해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의 노동자·농민 정권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인 것이다.

오기섭과 달리 김일성은 당시 한반도가 외부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식민지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국주의 세력은 남한을 점령한 미국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당조직문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자본가를 포함한 제 세력의 단결을 강조했다.<sup>27</sup> 이러한 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민족적 부르주아·지주 계급을 포용하면서 국유화와 중·소 개인기업이 공존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당면과

<sup>27</sup> 위의 책, p. 40.

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8</sup>

소련군정 당국도 당장의 소비에트정권의 수립보다는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연합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소련도 민족통일전선을 지지한 것이다.<sup>29</sup> 소련군정의 의도는 장안파와 조선공산당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장안파의 대표 이영과 최익한은 1945년 9월 30일 서울을 떠나 평양을 방문한 다음 10월 15일 서울로 돌아왔다. 이들이 평양에 간 이유는 소련의 의견을 들어서 당의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평양에서 소련의 입장을 듣고 서울에 전해주자 장안파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0월 12일 ‘정권수립과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한국의 현 혁명은 필연적으로 전진하는 부르주아 민주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 부르주아는 그들의 약점 때문에 이 혁명을 지도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주도세력이 되어야함도 강조했다.<sup>30</sup> 서구적 개념의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 즉, 자산가나 지주들이 주도하는 봉건타파를 위한 시민혁명을 일컫는 것이지만 이 당시 소련이나 조선공산당 세력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지칭했다. 이처럼 소련의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소련과 철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김일성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박헌영의 당면과제 인식도 김일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8월테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재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제2단계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sup>31</sup> 1945년 10월 30일 발표한 ‘조선공산당의 주장-조선민족통일전선 결성에 대하여’에도 이러한 인식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우선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이 주요 과제라며 그 내용으로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 언론·집회·결사·파업·시위·신교의 자유 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의무교육 시행, 근로대중생활의 급진적 개선, 남녀평등의

<sup>28</sup> 해방직후 김일성 세력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창만, “북조선 민주개혁의 역사적 근거와 그 사회적 경제적 의의,” 『인민』 (1949.12),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9(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pp. 429~453. 특히 p. 452. 또한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앞서고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아직도 뒤떨어지는(뒤떨어지는) 그런 전혀 새로운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자본가나 지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지식인·소시민 등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요산업 국유화 독본』(1948.2.10), 『북한관련사료집』 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9), p. 452.

<sup>29</sup>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pp. 40~41.

<sup>30</sup>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p. 327~328.

<sup>31</sup>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편, 『남로당자료』 I (서울: 코리아콘텐츠랩, 2002), p. 13.

선거·피선거권 보장 등을 들었다.<sup>32</sup> 사회주의 혁명은 당시 상황에서는 어렵고, 우선은 “민족의 완전독립-‘광범한 민주주의적 인민전선’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토지문제 등 해결”의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946년 1월에도 박헌영은 보다 분명하게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월 18일자 기자회견에서 박헌영은 당시 상황에서 한국은 사회주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회주의 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sup>33</sup>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제 세력이 연합한 정권을 세워 철저한 민주개혁을 하는 것이 당시 박헌영의 전략이었음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초기 오기섭의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해방정국에서 박헌영과 오기섭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오기섭의 국가건설 전략을 김일성, 박헌영과 비교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방정국 오기섭·김일성·박헌영의 국가건설전략

	오기섭	김일성	박헌영
당시 정세 규정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당면과제로 제시한 정부(국가) 형태	노농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국가	인민정권
구체적 실천 방안 (정치노선)	인민전선 (2단계 혁명)	민족통일전선	광범한 민주주의적 인민전선
주체 세력	노동자·농민 (모든 자본가·지주 제외)	노동자·농민·민족자본가·민족적 지주 (소극적 친일세력 포함)	노동자·농민·혁명적 인텔리겐차·소자본가·민족자본가 (친일 자본가·지주 제외)

### 3. 노선차이의 배경

오기섭이 인민전선을 주장하게 된 것은 그의 오랜 지하투쟁 과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오랜 지하투쟁과 13년간의 일제 감옥생활이 철저한 계급투쟁 성향의

<sup>32</sup>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주장 - 조선민족통일전선 결성에 대하여,” p. 4.

<sup>33</sup> “It Seems that I Was Misunderstood: Explanation of Park, Hun Yung to the Journalists,” *Seoul Shinmun*, 18 January 1946, Record Group 554,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75.

사상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8년 3월 북로당 2차 당대회에서 오기섭 자신도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오기섭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급진성향의 원인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에서 부단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혼히는 말할 수 없는 생활상 격심하고도 급격한 악화와 파멸을 당함으로 용이하게 극단적 혁명성으로 넘어가나 조직성과 규률(규율)과 강고성을 발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소부르쥬아 급진적 천진한 조급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sup>34</sup> 물론 당시에는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심하게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오기섭의 진심이라고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일제 하 지하투쟁과 자신의 인민전선론 형성과의 관계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하투쟁과 감옥생활이 일제 하 지주와 자본가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인식, 트로츠키의 노동자 독재를 연상시키는 급진적인 정치노선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노동자와 농민의 정권 구성에 대한 당위성을 체화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일성의 대중노선 민족통일전선은 그의 항일투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땅에서 일제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항일세력이 힘을 결집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이 해방 직후 국가건설 단계에서도 친일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포용을 주장하도록 한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상황은 민족주의적 자본가와 지주들의 세력이 강하고 공산주의세력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민족은 이제로부터 새 민주조선 건설에 힘을 합하여 나가야 되겠다. 어떠한 당파나 개인만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완전히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sup>35</sup>

#### 4. 국내 공산세력의 승리 그리고 패퇴

오기섭과 김일성의 노선투쟁은 초기부터 격렬했다. 1945년 10월 11~13일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이 문제로 국내파와 김일성파가 둘째 날 정면 대결했다.<sup>36</sup> 김일성은 당시 북한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

<sup>34</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948.3.29), p. 388.

<sup>35</sup> 『조선중앙년감 194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634.

인민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건설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해방 전 오기섭처럼 함경남도에서 적색노조 운동을 했던 국내파 정달현이 반격했다.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이다. 또 다른 국내파 김재갑은 김일성 노선은 ‘소부르주아적 우경 투항주의’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항일빨치산 가운데 이론가인 안길이가 일어나 반격했다. “반(反)파쇼 인민전선에서는 히틀러에 반대하면 자본가든 지주든 다 수용했다. 지금은 조국건설,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민족반역자는 심판하되 나머지는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다.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자들만으로 건국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양측의 논쟁은 감정싸움으로 발전해 논리적인 토론이 더 이상 전개되지 못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13일 김일성은 자기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조선이 역사적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내본적(內本的) 조건을 보면 노동자 단결이 없고 반동 부르조아지는 청산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역할은 전 힘을 다하여 민족통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곳에는 자본가도 참가한다”라고 연설한 것이다.<sup>37</sup> 하지만 이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민족통일전선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노선 확립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는 오기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고,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로 30개 항으로 이루어진 결정서 내용 가운데 제19항은 “동요 없는 궁극적 노동계급의 최후이익을 위한 불쉬비키당이 되기 위하여는(위하여) 당의 구성요소에 절대적 다수를 노동계급과 농민(특히 빈농)을 대열 내에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아직 북부조선당부에는 인텔리겐차와 소시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부가 있음을 적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sup>38</sup>

이 대회 이후에도 오기섭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친일세력의 철저 배격과 노동자, 농민의 적극 참여를 수시로 강조한다. 1945년 11월 7일 『정로』에 기고한 “중앙의 지시를 위한 투쟁”이라는 글에서 그는 “전조선인민의 의사에 의한 인민공화주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친일적 반동분자와의 투쟁을 철저히 하여 그들을 인민주권에 제외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있다. 친일적 반동분자와의 반대숙청투쟁이 없이는 전인민의 이익을 위한 인민전선은 결성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sup>36</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120~121.

<sup>37</sup>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1945.10.13),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3~10.

<sup>38</sup> “당의 진로명시 정치노선확립 조직확대강화 - 대회결정서,” 『정로』(1945.11.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5.

친일파 배격을 재차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 오기섭은 “북부조선당부는 노동자와 농민이 정권에 다수 참가하기에 노력한다”라며 노동자, 농민의 조직적 확대를 다시 한 번 역설한다.<sup>39</sup>

인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은 1945년 11월 23~24일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격돌했다. 김일성이 다시 국내파를 공격한 것이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국내파 일부를 포섭해 우위를 장악했다.<sup>40</sup>

양측의 격돌과 김일성 세력의 승리가 2차 확대집행위 회의에서 확인되었지만, 오기섭은 김일성 세력에 밀리는 형국을 알아차렸는지 이 회의 직전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1945년 11월 중순 열린 평양시당원회의에서 오기섭은 새로 건설되는 국가에 참여해야 하는 세력을 일일이 열거했다. 먼저 360만 노동자, 다음으로 1,700만 농민, 그리고는 지식인, 네 번째로는 진보적 민족자본가, 다섯 번째로는 반일본적 진보층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선에 사회주의혁명이니 쏘베트 주권을 지금 말하는 자는 사실로 역사적 과업을 무시하고 국제정세를 모르고 국내 통일을 분열시키는(시키는) 반공산주의자며 토로츠키적(트로츠키적) 좌경적 기회주의자이다”라고 강조했다.<sup>41</sup> 당장의 사회주의 혁명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것은 초기의 인식과 같은 것이나 노동자, 농민 외에 민족자본가와 진보층으로 국가건설 세력을 확대한 것이다.

오기섭은 민족적 자본가와 지주에 대해서 국가건설의 주도세력에 포함시킨 이후에도 불신을 표시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1946년 2월 신문 기고문에서 “민족부르조아 상부지도자들은 혁명적 객관정세와 혁명적으로 양양된 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지도한 형편에 속하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조아 지도자들은 그 계급적 약점과 모순에 의하여 대중의 혁명적 무장봉기와 반대방향-평화적 타협적 복구적 개량주의적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sup>42</sup> 3·1 운동 당시의 민족주의적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이지만 민족부르조아의 계급적 개량주의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 정국에서의 민족 부르조아에게도 해당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sup>39</sup> 오기섭, “중앙의 지시를 위한 투쟁,” 『정로』(1945.11.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 17~18.

<sup>40</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 172.

<sup>41</sup> 오기섭, “10월혁명 기념 투쟁총결산 보고 - 평양시당원회의에서,” 『정로』(1945.11.14),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 30~31.

<sup>42</sup> 오기섭, “3.1운동의 의의와 교훈,” 『정로』(1946.2.1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250.

여하튼 오기섭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본가와 지주에 대한 불신도 쉽게 버리지 못했다. 민족통일전선과의 노선싸움에서 패한 이후로 국가건설의 주도세력에 지식인과 민족 자본가·지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47년 3월 15일 나온 북조선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결정서는 “유감스럽게도 일부의 당지도부들은 인민의 민주주의적 이해를 위하여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호상협조하여야 하며 그 협조를 앞으로 튼튼히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아모러한(아무러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당의 일부 간부들이 민족통일전선 노선에 합류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sup>43</sup>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은 직접적으로는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하지만 이는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당간부는 당시까지 인민전선에 기울어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정서는 주녕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주녕하가 집요하게 오기섭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 IV. 공산청년동맹 견지 전략

1945년 12월 17~18일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도 인민전선 대 민족통일전선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김일성 세력은 공산청년동맹(공청)을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재조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는 민청을 통해 ‘청년의 통일’을 이루고 이를 민족통일전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었다.<sup>44</sup> 소수의 공산주의 지지 청년만을 가지고는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두 수용하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청년단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26개나 되었는데, 김일성은 이를 하나로 묶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 1945년 11월 3일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조선민주당에 많이 입당했다. 함흥비료공장 등 전국

<sup>43</sup> 『북조선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결정서』, 북한노획문서, Box 41, 문서번호 201205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Box 41, Document No. 201205), pp. 5~6.

<sup>44</sup> 한재덕, 『김일성 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출판부, 194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p. 344.

주요 기업소와 공장의 청년노동자 2천여 명이 한꺼번에 이 당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청을 해체하고 민청으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생각이었다.<sup>45</sup>

오기섭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대했다. 오기섭의 생각은 공청을 정예화해 공산주의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레닌청년공산주의동맹을 모델로 한 것이다. 오기섭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창설 당시 ‘정예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건설’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달헌은 함경남도도 내려가 함남지역만은 공청을 민청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sup>46</sup>

하지만 김일성은 ‘공청 해체 민청 수립’을 밀어붙였다. 조선민주당에 청년조직을 만들면 그쪽으로 청년들이 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산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북한에는 기독교세력이 여전히 강해 기독교도인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민주당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청년조직을 만들고 이를 공청과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이기는 전략이 못 된다는 판단이었다.

양측의 논쟁이 심해 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책임비서가 된 김일성은 12월 말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듭하면서 소련파를 설득해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청을 새로 결성하기로 한다. 1946년 1월 3일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6~17일 북조선 민주청년단체 대표자회가 열려 민청 구성이 공식 의결되었다.<sup>47</sup> 이러한 민청 설립 과정이 조선노동당 부부장을 지냈던 박병엽의 증언인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평양에서 노획한 문서는 좀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1945년 8월부터 1949년 3월까지 북한의 주요 결정과 사건 등을 정리해 놓은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주요일지』라는 노획문서는 1945년 11월 27일 민주청년동맹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김일성이 연설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8</sup> 김일성이 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민주청년동맹을 어느 정도 구성하고,

<sup>45</sup> 공청과 민청을 둘러싼 김일성과와 국내파의 입장 대결에 대해서는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p. 308~313 참조.

<sup>46</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회의록』(1948.3.2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 417.

<sup>47</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 311.

<sup>48</sup>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1945.8~1949.3),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p. 582.

이 조직을 민족통일전선 노선의 확대와 강화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말에 다시 민청에서 연설을 한 것으로 『평양민보』 12월 30일 자가 보도하고 있다.<sup>49</sup>

더욱이 1946년 1월에 이르러서는 오기섭도 직접 민청 행사에 참석해 연설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기섭이 민주청연동맹 1946년 1월 2일 평양인민극장 모임에서 연설을 한 것이다. 오기섭은 이 자리에서 ‘삼국외상회담에 있어서의 조선문제결과와 조선공산당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찬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sup>50</sup> 이러한 자료들로 판단할 때 1945년 11월 민청이 세워졌고, 1946년 1월에는 오기섭도 이를 인정하는 단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민청 수립과 오기섭의 인정은 인민전선 세력의 약화, 민족통일전선의 보다 분명한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V. 직업동맹 독립론

국내파의 이념과 전략은 직업동맹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기섭은 실제로 직업동맹의 성격에 관해 많은 논문을 쓰고 연설을 했다. 함경도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노조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평양에 진출한 그로써는 당연한 것이었다. 오기섭은 직업동맹은 당의 지지단체도 아니고 국가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며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보았다.<sup>51</sup> 심지어 직업동맹은 지위 면에서 당과 대등하고, 따라서 당의 직업동맹에 대한 지도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일성의 당 우위론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자기사업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은 당은 보통 조직이 아니고 노동계급의 기타 모든 조직체 중에 있어서 고상한 형태의 조직이며 노동계급의 기타 모든 조직체를 지도할 단체이다”라며 직맹도 당의 지도하에 존재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sup>52</sup>

오기섭은 직맹은 철저히 공산주의로 무장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자

<sup>49</sup> 한재덕, 『김일성 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출판부, 194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pp. 343~344.

<sup>50</sup> “삼국외상회의의 조선문제결과와 조선공산당의 태도,” 『정료』(1946.1.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109.

<sup>51</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 311.

<sup>52</sup> 김일성, 「북부조선당 공작의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 - 조공북조선분국 중앙제3차 확대집행위에서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 6.

의 복지를 위해 기업가와 공장주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영기업의 노동자도 국가조직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평양방직공장과 평양제사공장, 평양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오기섭은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리더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전평 북부조선총국 결성을 기념한 『평양민보』 1945년 11월 30일자 사설은 국가건설에서 노동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기섭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가장 진정한 애국자들이다”이라고 말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 사설은 “노동자의 유일한 힘은 수에 있다. 그런데 단결을 잃으면 수의 힘은 붕괴된다”라는 마르크스의 발언과 함께 오기섭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글은 또 노동자들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위부대가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sup>53</sup> 그런데 오기섭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오기섭을 노동자들의 리더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기섭의 직맹 독립성 강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생산과정에서 침해가능성이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직업동맹이 당이나 정권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다. 둘째는 정치투쟁이었다. 김일성은 오기섭의 정치적 기반인 노조를 무너뜨리고 직업동맹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기섭을 제거하려 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기섭은 직업동맹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공적인 간행물에는 그의 다른 주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1945년 11월 14일 『정로』에 실린 ‘레닌의 공산당 조직원리 개요’라는 해설기사에서 그는 “당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며 한 부대이기는 하지만 당은 보통부대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력대중의 지도단체이며 노동계급의 전위조직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균중조직이다. 또 당은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 중에 최고단체이며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를 지도한다”라고 주장했다.<sup>54</sup> 당의 직업동맹에 대한 우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sup>53</sup> “Editorial: Congratulations in Order on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 General HQ of the Korean Labor Union,” *Pyong Yang Min Bo*, 30 November 1945, Record Group 554,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65.

<sup>54</sup>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p. 17 재인용.

1945년 11월 시점에 벌써 그의 입지가 공적 간행물에서 김일성과 반대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17~18일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은 오기섭의 직업동맹관을 맹렬히 공격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직업동맹 지도는 공산당의 사업이 아니며 직업동맹은 당지도 하에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는 자들이 있다”며 오기섭을 몰아세웠다.<sup>5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초 무렵까지는 오기섭이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오기섭은 1946년 1월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확대위원회 축사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직업단체이며 노동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조직입니다. 금일 조선이 산업정체를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며 예의 자기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그러면서 “권력 기관인 인민위원회는 노동자의 이익옹호를 위하여 친절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sup>56</sup> 직업동맹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그 존재이유가 있으며, 인민위원회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역설한 것이다.

1946년 2월 무렵이 되어서는 직업동맹보다는 국가의 발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김일성 세력의 인식이 보다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조선민주당 황해도 지부는 1946년 2월 12일자 『일간 자유항해』에 보도된 당시 정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현재 문제는 역사적 생산 공동체의 조속한 발전이다. 즉, 인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 단계의 첫 번째 명령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도 이러한 근본적 노선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7</sup> 민주당 위원장 조만식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다가 1946년 1월 6일 소련군에 의해 연행되어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조선민주당은 최용건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러면서 민주당도 노조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의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지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이 오기섭의 직업동맹관을 비판한 것은 1회전에 불과했다. 1946년 11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제3차 확대전원회의는 북한의 국가건설과 이를 위한 경제력 증진, 또 이를 위한 내부결속의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sup>55</sup>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pp. 5~6; 백학순, 위의 책, p. 18 재인용.

<sup>56</sup> “인민위원회의 나갈 길 - 오기섭동지 축사 요지,” 『정로』(1946.1.2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175~179.

<sup>57</sup> Headquarters, USAFIK, Office of the A. C. of S., G-2, Language and Document Section, APO 235, 9 March 1946, p. 116.

주녕하는 이 회의에서 또 오기섭의 직업동맹관을 공격했다.

1947년 2월 8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도 공격은 이어졌다. 오기섭이 1946년 9월 어느 날 『로동신문』에 게재했다는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가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 글의 내용은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부질없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직업동맹은 그와 같은 직장과 투쟁하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8</sup>

공격의 선봉은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녕하였다. 주녕하는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이미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에 반대하여 투쟁할 수 없다”며 오기섭을 공격했다. 주녕하는 또 오기섭이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조합이론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사리를 잘 모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의 대상이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고의로 선동했다고 역설했다.<sup>59</sup>

오기섭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기본적인 주장이라며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다니던 일어판 『레닌선집』까지 펼쳐가면서 열변을 토했다.<sup>60</sup> 그런데 실제로는 『로동신문』에 오기섭의 글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창순은 ‘1946년 9월 또는 10월 어느 날’,<sup>61</sup> 서대숙은 ‘1946년 9월 18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sup>62</sup> 1946년 9월 1일부터 1947년 4월말 사이 『로동신문』에 그런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다만 당시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로동신문』이 배포되었다고 김창순이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든 오기섭의 글이 발표되긴 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라는 글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가 작성한 1947년 3월 19일자 『북조선 인민정권 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라는 제목 하에서 오기섭 동무가 범한 엄중한 정치적 오류에 관하여』라는 문건에 의하면 오기섭의 직업동맹에 관한 주장이 담긴 이 글

<sup>58</sup> 김창순, 『북한15년사: 1945년 8월~1961년 1월』 (서울: 지문각, 1961), pp. 108~109.

<sup>59</sup> 위의 책, pp. 107~108.

<sup>60</sup> 김창순, “김일성의 제1호 정적 오기섭의 최후와 그 해학,” 『북한』 제197호 (1988), p. 125.

<sup>61</sup> 김창순은 『북한15년사: 1945년 8월~1961년 1월』 (서울: 지문각, 1961), p. 108 에서는 9월에, “김일성의 제1호 정적 오기섭의 최후와 그 해학,” p. 124 에서는 10월에 오기섭이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를 발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sup>62</sup>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85.

“북조선 인민정권 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 『로동신문』 1947년 3월 13일자(제60호)에 실려 있다고 한다.<sup>63</sup> 하지만 해당일자 신문에 그의 글은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오기섭의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로동신문』 주필 태성수가 견책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로동신문』이 오기섭의 글과 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위 문건에 의하면 오기섭은 자신의 글에서 북한에서 국유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리익의 대립은 남아있는 것이며 직업동맹이 각 방면으로 노동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를 공공연하게 내걸어야 하며 직업동맹은 노동대중의 리익의 옹호를 위하여 조건에 적합하게 개조되고 변경되고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sup>64</sup> 이와 관련해 의아스러운 점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오기섭의 발언이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에서 밝혔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1946년 10월 19일 각도 노동부장회의에서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부장이었던 오기섭은 “금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술을 타개하여 산업국과 협력하여 생산을 높이며 생산을 높임으로써 실업자를 없애야 하겠다”고 말했다.<sup>65</sup> 노조의 활동보다는 노동자와 정부 또는 국유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1947년 2월 12~13일 제3차 각도 노동부장·과장회의에서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장으로 참석한 오기섭은 직업동맹은 노동행정에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sup>66</sup> 초기 자신의 주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오기섭은 절충적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적 제한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업동맹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더라도 권리의 역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국가도 역사발전단계와 생산력의 정도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 노동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직업동맹은 과거나 현재나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체이지만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역할도 해야하고,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규율, 긴장한 노동, 규범노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보험, 노동보호, 물질적·문화적 향상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67</sup> 오기섭 세력은 때로는 강경하게 노동

<sup>63</sup>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북조선 인민정권 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라는 제목 하에서 오기섭 동무가 범한 엄중한 정치적 오류에 관하여,”(1947.3.1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8), p. 158.

<sup>64</sup> 위의 글, p. 159.

<sup>65</sup> 『로동신문』, 1946년 10월 21일.

<sup>66</sup> 『로동신문』, 1947년 2월 16일.

<sup>67</sup> 오기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의 사명,” 『인민』 제2권 제1호 (1947.1.10), 국사편찬

자 우대 전략을, 때로는 김일성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때로는 절충 입장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권력투쟁에서 밀리면서 자신들의 국가발전 전략도 자연스럽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947년 3월 15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차 확대회의에서 다시 김일성이 직접 오기섭 공격에 나선다. 김일성은 오기섭의 주장이 국영기업소 내에도 자본과 노동 사이 계급적 이익이 대립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인민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기섭이 해방 직후 함경남도에서 지방할거의 모습을 보인 것, 토지개혁 당시 평안북도에서 과오를 범한 것도 묶어서 비난했다.<sup>68</sup>

3월 19일 당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고, 그 결정서를 하급단체에 보내도록 했다. 오기섭을 북한사회 전체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 회의에서 오기섭은 당중앙위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오기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장에서도 경질되었다. 직업동맹과 관련한 국내파의 주장은 인민전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었는데, 역시 직업동맹 자율성 주장도 오래가지 못한 것이다.

## VI. 국내파 국가건설전략의 형성 원인

### 1. 해외파에 대한 불신과 배척

당시 국내파가 인민전선을 내세우게 된 원인은 당면과제가 국내 파쇼세력의 타도라는 기본적인 인식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통일전전파와 인민전전파의 인식 차이에는 해외파와 국내파라는 입지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소련을 거쳐 해방 직후 귀국했다. 때문에 국내기반이 약했다. 그래서 친일파는 수용 불가능하지만 민족주의적 입장을 지닌 지주와 자본가는 연합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또,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김일성 세력은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김일성은 이미 소련점령군이 처음부터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

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3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2), p. 192.

<sup>68</sup> 김일성,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결론”(1947.3.15),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86~187.

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도 통일전선을 주장했다. 여기에 비해 오기섭은 국내세력으로서 국내적 기반을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믿고 지주와 자본가를 제외한 노동자 중심의 인민전선을 내세운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파에 대한 불신도 개입되어 있었다. 국내파 정당헌은 “쓰러 혹은 중국에서 들어온 동지들과 새로운 힘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자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을 받았어야 할 현명한 자각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둔하였던 것입니다. 도리어(도리어) 이런 동지들을 반신반의하는 독선자존의 태도까지 비록 일시나마 가지었던(가졌던)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짧은 인식을 반성하는 내용이지만 해방 직후 국내파가 해외파에 대해 품었던 불신도 내비치고 있다.<sup>69</sup> 그런 만큼 국내파는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 데는 민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공산세력이 인민전선을 주장한 또 하나의 원인은 당시 북한지역에 공산주의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파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김일성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전 조선로동당 부부장 박병엽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10월 서북5도 당대회가 열릴 당시 공산당원은 1,000명 정도였고 제대로 된 당원은 그 절반인 500명 수준이었다.<sup>70</sup> 1945년 12월 조선로동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릴 즈음에는 당원이 4,530명이었다.<sup>71</sup> 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당시 대표위원 801명을 선출했는데, 그 가운데 해방 이전부터 당 생활을 했던 사람은 62명으로 전체 대표위원의 7%에 불과했다.<sup>72</sup>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 측면에서 김일성파가 국내파보다는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국내파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주도하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세우는 국가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 2. 노동세력 기반 발전전략

직업동맹 문제를 두고도 오기섭 세력과 김일성 세력이 심하게 투쟁을 한 것은 해방이후 북한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략의 차이 때문이다. 오기섭은

<sup>69</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3.29), p. 404.

<sup>70</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 121.

<sup>71</sup>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5.12.17), 『김일성 저작집』, p. 476.

<sup>72</sup>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1946.8.2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 110.

국가의 발전도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가운데 추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김일성 세력은 경제력 확대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3월 들어 바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일련의 민주개혁 작업을 시행해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본구조를 확립했다. 오기섭의 직업동맹관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고, 오기섭은 초기 자신의 주장에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오기섭의 계급노선과 김일성의 대중노선의 근저에는 이들의 국유화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고 있었다. 북한은 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면서 국유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일제의 소유이었던 모든 기업과 발전소, 철도, 광산, 운수, 체신, 은행 관련 시설이 국유화되었다. 이와 함께 1946년 10월 4일에는 개인소유권의 보호와 개인 상공업자들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국유화된 산업시설만으로는 인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상공업자들의 생산활동 보장을 통해서 부족한 공급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북한체제의 성격은 일부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허용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격의 인민민주주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은 이 체제를 유지했다. 오기섭은 인민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유화와 관련해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세력은 이를 사회주의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하고 생산관계의 변화 자체에만 주목했다. 국유화에 따른 노동자들 스스로의 정체성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 국유기업의 주체적 성원으로의 발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국유화는 곧 해당기관의 전 인민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회주의이며, 따라서 노동계급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성과를 독점하는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고 노동의 성과로 발생한 잉여가치가 전적으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보았다.<sup>73</sup> 국유기업에서는 기업주라는 협상과 투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동맹의 독자성도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오기섭은 국유화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국유기관 사이의 이익은 일치

<sup>73</sup> 「중요산업 국유화 독본」(1948.2.10), p. 435.

되는 것이 아니고 계급적 이익의 대립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그럴 경우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섭은 또 식량 부족이나 생활곤란 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정권기관과 마찰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노조는 노동자의 입장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sup>74</sup>

더욱이 오기섭은 당시 북한체제가 사회주의가 완전히 진행되지 못한 단계이고, 국유화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 직업동맹은 국가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고유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948년 조선로동당 제2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오기섭이 레닌의 신경제정책(NEP)의 논문을 그대로 도적질했다고 비난했는데,<sup>75</sup> 이는 오기섭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요컨대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도, 완전한 국유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직업동맹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기섭의 주장이었다. 이는 경제력 확대 우선론에 맞서는 노동자 기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3. 노동세력 최후 보루화

소련에서도 이미 ‘당의 직업동맹 지도’로 결론이 난 문제를 두고 왜 오기섭은 직업동맹 중심의 주장을 계속했을까? 무엇보다 오기섭은 직업동맹을 권력투쟁의 최후 보루로 간주했던 것 같다.<sup>76</sup> 경쟁자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기섭은 노동조합 외에는 별다른 지원세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기섭은 자신이 오랫동안 관여해온 노조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직업동맹 중심의 오기섭 인식은 해방 전 오랜 감옥생활과 관계가 있다. 그의 수감생활은 13년이 넘는다. 그러는 동안 그의 인식은 변화하는 주변정세의 민첩한 인식보다는 과거에 고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기섭은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자아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오류를 범한 원인은 “국제 국내 정치정세를 바로 분석하지 못하고 새환경 새정세 하에서의 혁명적 당의 정책과

<sup>74</sup>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북조선 인민정권 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라는 제목 하에서 오기섭 동무가 범한 엄중한 정치적 오류에 관하여,”(1947.3.19), p. 160

<sup>75</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3.29), p. 417.

<sup>76</sup>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p. 24.

로선을 바로 인식 못 하고서 10년 전 낡은 정세와 조건이 다른 시기의 인식-이 인식을 가진 자가 나뿐이 아니지만-을 고집한 데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sup>77</sup> 이런 점으로 미루어 오기섭은 전략과 전술에 능하면서 신축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 다음 하나의 인식체계를 갖추게 되면 쉽게 바꾸지 않는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또한 김일성과 다른 면이다.

오기섭이 노조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 만큼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를 해체하든지 성격을 개조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946년 5월 그 성격을 바꾸는 작업을 단행했다. 5월 10일 박헌영과 오기섭을 지지하던 전평 북조선총국의 지도부를 교체했다. 위원장을 현창형에서 친김일성 성향인 최경덕으로 바꾼 것이다.<sup>78</sup> 25일에는 전평 북조선총국을 북조선직업동맹으로 탈바꿈시켰다. 행동강령도 개정해 당과 직맹의 관계를 ‘당은 지시하고 직맹은 협조하는’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공산세력의 세력기반은 현저히 약화되어 갔다.

## VII. 맺는 말

국내 공산세력이 스스로의 정치노선을 펼치지 못하고 김일성 세력에 의해 붕괴된 원인은 무엇보다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된 데 있었다.<sup>79</sup> 오기섭을 중심으로 했지만 결속력은 약했다. 김일성의 소련과의 협력과 그의 권력 강화에 대해 분개했지만,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반대세력과 대항하기 위한 면밀한 전략은 마련하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내 공산세력은 소련군이 북한을 떠나면 김일성파가 자연히 붕괴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힘을 규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 감옥생활을 하다 출옥한지 얼마 안됐거나 지하 은신생활을 하다 활동을 시작한 상태였고, 북한 지역 내에서도 횡적 연대가 형성되지 못했다.<sup>80</sup> 소련군을 등에 업고 권력을 획득하려는 세력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sup>77</sup>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3.29), p. 387~388.

<sup>78</sup> 최경덕은 해방전 평남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로 김일성의 평양 입성 직후인 1945년 9월 말 항일빨치산과 조직인 조선공작단에 들어갔다. 이때 함께 입단한 사람들이 김용범, 박정애, 리주연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p. 144.

<sup>79</sup> 북한 국내 공산세력의 김일성 세력과의 경쟁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pp. 292~298 참조.

<sup>80</sup>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p. 406.

둘째, 국내 공산세력은 소련 공산당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소련 공산당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1928년 이후 당 재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 때문에 소련의 지도자들은 한국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했고, 끊임없이 파벌싸움을 계속하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sup>81</sup> 한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련 공산당과의 연계는 이미 1935년 7월 코민테른 제7차 총회 이후로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소련군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 세력과의 정치투쟁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국내 공산세력은 북한 각 지역의 세포조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항일빨치산과는 1945년 9월 원산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주요인물들이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지역 상황을 살피고, 유력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곧바로 진행했다. 하지만 국내 공산세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추려는 시도, 이를 국가건설의 조직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북한 국내 공산세력의 와해는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인민전선 노선의 패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세력에 대한 정치노선 견제세력의 조기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연안파·소련파 숙청과 연결되면서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 형성 과정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산세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인민전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공산세력의 국가건설전략의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방직후 정세를 자본주의 단계로 파악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인민전선의 실행전략으로 ‘인민자주적 공화국’ 건설, 이후 ‘노농소비에트’ 완성이라는 구도를 가진 ‘노동자·농민 중심 속성 2단계 혁명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빈농위원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연안파와도 달리 인민전선이 대중성 확보에 실패한 구체적인 원인, 국내파 주요세력의 분열 과정, 이와 관련한 김일성 세력의 정치전략 등 아직도 규명해야할 부분이 아주 많다. 후속 연구의 초점은 이런 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 09월 16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22일

<sup>81</sup> 위의 책, p. 405.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인덕. 『공산주의와 통일전선』. 극동문제연구소, 1980.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서울: 선인, 2003.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8.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 김창순. 『북한50년사』. 서울: 지문각, 1961.
-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서울: 이론과 실천, 1985.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Armstrong, Charles K.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New York: th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2. 논문

- 강혜경. “1930년대 후반 ‘왜관그룹’의 인민전선술 수용.” 『역사연구』. 제3호, 1994.
- 권오윤. “해방후 노동조합으로서 북한 직업동맹의 성격 변화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제11호, 2001.
-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북한공산화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72.
- 김창순. “김일성의 제1호 정적 오기섭의 최후와 그 해학.” 『북한』. 제197호, 1988.
-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 서인석.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와다 하루키. “소련의 대북한정책 1945~1946.”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 제70권, 2008.
- 윤덕영. “해방직후 사회주의진영의 국가건설운동.” 『학림』. 제14권, 1992.
- 이신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주철. “북한의 국영기업 관리와 노동정책: 1946~1948년을 중심으로.” 『사충』. 제46집, 1997.
- 조민. “북한에서의 민주개혁과 통리전선.” 『연세』. 제25권, 1987.

조수룡. “북조선직업총동맹의 성립과 활동(1945~1950).” 경남대 북한대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 북한 자료

『조선중앙년감 1949』. 서울: 조선중앙통신사, 1949.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1945.10.13)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대하여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결론.”(1947.3.15).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북부조선당 공작의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 - 조공북조선분국 중앙제3차 확대집행위에서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_\_\_\_\_.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5.12.17)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창만. “북조선 민주개혁의 역사적 근거와 그 사회적 경제적 의의.” 『인민』 (1949.12).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박현영. “조선공산당의 주장 - 조선민족통일전선 결성에 대하여.”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옳은 노선』, 도쿄: 민중신문사, 1946.

오기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의 사명.” 『인민』. 제2권 제1호 (1947.1.1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3.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2.

오기섭. “3.1운동의 의의와 교훈.” 『정로』(1946.2.1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_\_\_\_\_. “10월혁명 기념 투쟁총결산 보고 - 평양시당원회의에서.” 『정로』(1945.11.14).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_\_\_\_\_. “안(인)테리에 대한 제언,” 『정로』(1946.1.2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_\_\_\_\_. “중앙의 지시를 위한 투쟁.” 『정로』(1945.11.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재덕. 『김일성 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출판부, 194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당의 진로명시 정치노선확립 조직확대강화 - 대회결정서,” 『정로』 (1945.11.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북조선로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 결정서』, 북한노획문서, Box 41, 문서번호 201205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Box 41, Document No. 201205).

-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1948.3.27~3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북조선 인민정권 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라는 제목 하에서 오기섭 동무가 범한 엄중한 정치적 오류에 관하여.”(1947.3.1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련사료집』 3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삼국외상회의 조선문제결정과 조선공산당의 태도.” 『정로』(1946.1.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간다.” 『청년생활』. (1949.8), 북한노획문서, Box 77, 문서번호 201870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Box 77, Document No. 201870).
- “인민위원회의 나갈 길-오기섭동지 축사 요지.” 『정로』(1946.1.2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중요산업 국유화 독본』(1948.2.1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련사료집』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1945.8~1949.3).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편, 『남로당자료』 I. 서울: 코리아콘텐츠랩, 2002.
- “Editorial: Congratulations in Order on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 General HQ of the Korean Labor Union.” 『Pyong Yang Min Bo』. 30 November 1945. Record Group 554.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65.
- “Establishment of the Workers’ and Peasants’ Regime……Japanese Land Should Be Confiscated.” 『Hae Bang Ilbo』. 31 August 1945. Record Group 554.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65.

## Abstract

# The Strategy of the Indigenous Communists in North Korea for Nation-building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ocusing on O Ki-seop's 'People's Front'

Mun-Suk Ahn

The indigenous Communists - who struggled with anti-Japanese partisans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 had a clear strategy for nation-building, 'People's Front.' The 'People's Front' made a striking contrast with Kim Il-sung's 'National Unification Front.' The former aimed to form a 'Labor-Farmer Soviet' consisting of laborers and peasants, the latter intended to include national capitalists and landowners in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However, research on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eople's Front' and 'Labor-Farmer Soviet'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is paper articulates the indigenous Communists' strategy for nation-building through investigating the seized records by the U.S. Military Forces in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cords concerning U.S.A.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Labor-Farmer Soviet' referred to a government controlled by laborers and farmers on the basis of nationalizing land and factories. To accomplish this goal, O Ki-seop and indigenous Communists seemed to design a two-step revolution strategy. The first step was similar to the bourgeois revolution which might take place in a capitalist state. They argued that they should establish a 'People's Autonomous Republic' though the first step. Unlike the Marxist theory, the main group was supposed to consist of laborers and farmers even in the first step. The second step was the socialist revolution. Since the emphasis was put on the 'Labor-Farmer Soviet' the first step needed to be completed in a short period. Their strategy for nation-building can be called an 'intensive two-step revolution led by laborers and farmers.'

They also tried to oppose the Democratic Youth Alliance to maintain the Communist Youth Alliance and to carry out the strategy of the 'People's Front.' In the same vein, they argued for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 from the party. They failed to realize their strategy because of their defeat in the power struggle against Kim Il-sung. However, their ideology and strategy need to be looked into further to gain access to the truth of North Korea's nation-building process. Above all, the detailed program of the 'Poor Peasants' Committee' and the process of split within the indigenous Communists should be investigated.

**Key Words:** Indigenous Communists in North Korea, Anti-Japanese Partisans, People's Front, National Unification Front, O Ki-seop, Kim Il-sung, Labor-Farmer Soviet, Two-Step Revolution, Communist Youth Alliance, Labor Union, Poor Peasants' Committee

